



장애 등급 판정 이후, 당신의 권리와 미래를 위한 전략 로드맵

치료는 끝났지만, 당신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 가이드는 복잡한 절차 속에서
당신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장애 등급 판정은 산재 요양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재건하는 출발점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권리가 있는지, 어떻게 미래를 계획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 **Phase 1: 즉각적인 권리 확보:**
장애급여를 신청하고 중요한 첫 선택을 내리는 단계
- **Phase 2: 미래의 건강 관리:**
상태 악화에 대비하는 '재요양' 제도 활용법
- **Phase 3: 성공적인 직업 복귀:**
공단 재할 지원 시스템을 100% 활용하는 전략
- **Phase 4: 법적 권리 최종 점검:**
산재 보상 외 민사 소송 및 기타 복지 제도 연계



PHASE 1: 즉각적인 권리 확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장해급여 청구

- ✓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신체에 남은 장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 ✓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 ✓ **Tip:** 절차의 편의를 위해 치료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병원)을 통해 서류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주의사항

3년의 소멸시효 : 장해급여 청구권은 '치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첫 선택: 연금 vs. 일시금

장해 등급에 따라 보상 방식이 달라지며, 4급~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재정 계획, 재취업 가능성, 민사소송 계획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구분	장해연금 (Disability Pension)	장해일시금 (Disability Lump-Sum)
대상 등급	제1급 ~ 제7급	제8급 ~ 제14급
선택 가능	제4급 ~ 제7급 근로자는 선택 가능	
장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 보장. 매년 임금 상승률에 연동되어 연금액이 증액 (실질 가치 보존)	목돈을 즉시 수령하여 부채 상환, 사업 자금 등 활용 가능
고려 사항	월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 위험. 인플레이 방어 불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 모든 의료 기록을 영구 보존하십시오



전문가 인사이트

Why it's critical: 장해 진단서, 진료 기록부, 그리고 특히 **MRI, CT, X-ray 등 영상 자료 CD**는 단순한 현재 증빙 자료가 아닙니다.

The Future Proof: 향후 상태가 악화되어 '재요양'을 신청할 때, 이 자료들은 '**최초 치유 시점의 객관적인 상태**'를 입증하고 '**악화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The Bottom Line: 이 자료들의 보존 여부가 미래의 재요양 승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본을 만들어 영구적으로 보관하십시오.



'치유 종결'이 완전한 치료의 끝은 아닙니다: 재요양 제도

What is '재요양'?

산재 치료가 종결된 후, 기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다시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등)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Case Study

용접공 A씨의 사례: 손가락 절단 수술 후 업무에 복귀했으나, 후유증으로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능 회복을 위한 추가 수술(재요양)을 신청했고, 처음에는 불승인되었지만 재심사 청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재요양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당신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권리임을 보여줍니다.



재요양,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을 위한 3가지 핵심 조건

재요양은 단순 후유증 관리가 아닌, '적극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므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의학적 인과관계

치유된 기존 상병과 현재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



업무 외 사유 배제

나이나 다른 개인적 사유로 인한
악화가 아니어야 합니다.

3



명확한 치료 효과

재요양을 통해 상태가 호전*될
것이라는 치료 효과가 의학적으로
기대되어야 합니다.

Key takeaway: 신청 시 주치의 '재요양 소견서'가 결정적입니다. 단순한 통증 호소가 아닌, 적극적 치료를 통해 기능이 개선될 수 있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시 일터로: 근로복지공단 직업재활 시스템 100% 활용법

장해급여 수령이 보상의 끝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의 시작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근로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 복귀를 위해 무료 맞춤형 통합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Your Support Team

잡코디네이터 (Job Coordinator), 주치의, 산재관리 간호사 등 전문가팀이 당신의 직업 복귀를 위한 개인별 계획을 계획을 수립하고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당신의 재활 노력을 뒷받침하는 직접 지원금 제도

공단은 직업 복귀를 위한 당신의 노력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훈련 및 재활 지원금 (For All Workers)



직장 적응 훈련비: 최대 3개월, 총 135만 원 지원



재활 운동비: 최대 3개월, 총 45만 원 지원

원직장 복귀자 특별 지원금 (For Workers Returning to their Original Job)

장해 등급에 따라 원직장에 복귀하여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12개월간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 등급	월 지원액	최대 지원 한도 (12개월)
제1급 ~ 제3급	80만 원	960만 원
제4급 ~ 제9급	60만 원	720만 원
제10급 ~ 제12급	45만 원	540만 원

💡 협상의 기술: 사업주가 받는 혜택을 알면 복귀가 쉬워집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도 강력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원직장 복귀 논의 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mployer Incentives

- 직장복귀지원금: 장애인(1급~12급)을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960만 원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당신의 요양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360만 원 지원

💡 전략적 활용법

복귀를 논의할 때, 회사가 당신을 다시 고용함으로써 얻게 될 이 재정적 혜택을 함께 제시하십시오. 당신의 복귀는 회사에 부담이 아니라, 정부 지원을 받는 합리적인 경영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 그 이상: 당신의 모든 법적 권리를 지키는 법

장해급여 수령 후에도 당신의 권리 확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법적 절차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1. 산재 결정에 대한 불복 (Appealing the Sanjae Decision)

장해 등급 등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 등급 결정



2.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Filing a Separate Civil Lawsuit)

사고 발생에 사업주의 과실이 있었다면,
산재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두 개의 시간: 90일 그리고 3년

법적 권리는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다음 두 기한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90일

재심사 청구 기한

What: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When: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 날짜를 놓치면 더 이상 다룰 수 없습니다.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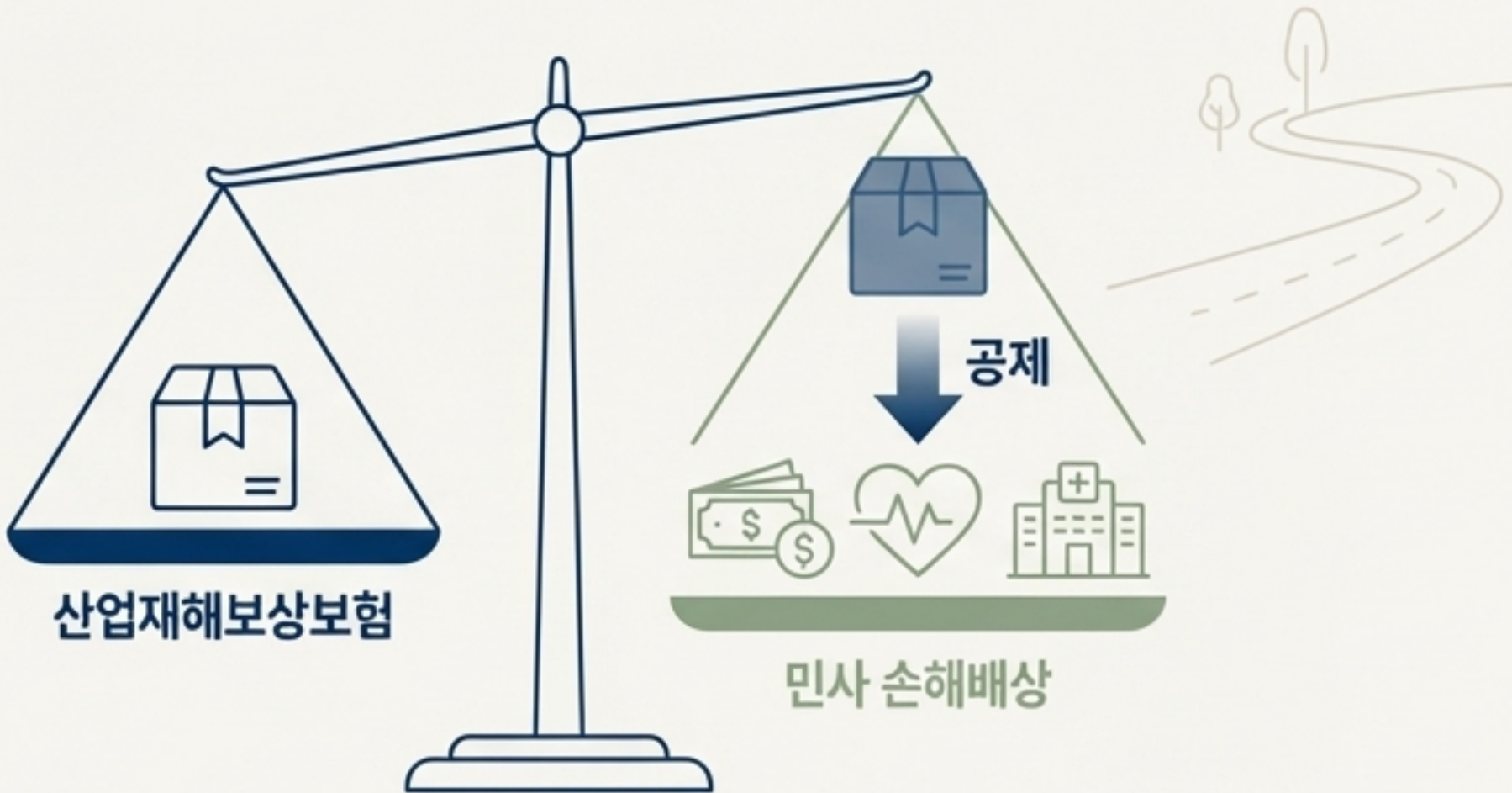
민사소송 소멸시효 (주의!)

What: 사업주가 아닌 제3자(예: 원청 건설사)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When: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장해 등급 판정이 늦어지더라도 이 시효는 사고일부터 계산됩니다.
(참고: 직접 고용주에 대한 청구 시효는 10년)

산재 보상과 민사 배상, 무엇이 다른가?

두 제도는 보상의 성격과 요건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민사 소송의 실익은 산재 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 발생합니다.



구분	산업재해보상보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성립 요건	업무상 재해 인정 (사업주 과실 불필요)	가해자(회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 입증 필수
보상 내용	법에 정해진 정액 보상 (위자료 없음)	실제 손해액 (일실수입,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
관계	산재에서 받은 급여액은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Key Takeaway: 가장 유리한 전략은 일반적으로 산재 보상을 먼저 받고, 사업주 과실이 명백하다면 산재 보상으로 충족되지 않는 부분(특히 위자료)에 대해 민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추가 사회 안전망

산재 보상 외에도 당신이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개념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Table 1

‘장해’와 ‘장애’는 다릅니다



산재 장해



복지 장애

구분	산재 장해 (産業災害 障害)	복지 장애 (福祉 障碍)
목적	노동 능력 상실에 대한 보상	생활의 불편함에 대한 복지 지원
주관	근로복지공단	보건복지부 (주민센터 신청)
혜택	장해급여 (연금/일시금)	공공요금 할인, 복지카드 등
핵심	산재 장해 등급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Table 2

국민연금 장애연금과의 관계



국민연금

- Can you get both? Yes, but...
- Adjustment 산재 징해급여와 국민연금 징해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이중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액이 일부 조정(감액)됩니다.
- Action 수급 요건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회복과 재건을 위한 최종 행동 체크리스트

당신의 새로운 여정을 위한 단계별 행동 계획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당신의 권리를 하나씩 점검하고 실행하십시오.

☑ 즉시 (Immediately)

- ☐ 장애급여 청구 (치유일로부터 3년 시효 절대 준수)
- ☐ 연금 vs. 일시금 신중히 선택 (4~7급 해당 시)
- ☐ 모든 의료 기록 (특히 영상 CD) 사본 확보 및 영구 보관

☑ 중기 (Mid-Term: ~3년 이내)

- ☐ 민사소송 고려 시 법률 전문가 상담
(특히 원청 등 제3자 대상 3년 시효 주의)

☑ 단기 (Short-Term: ~90일 이내)

- ☐ 장애 등급 결정 불복 시 재심사 청구
(결정 안 날로부터 90일 기한)

☑ 장기 (Long-Term: 상시)

- ☐ 근로복지공단 직업재활 프로그램 등록 및 상담
- ☐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별도 신청 검토
- ☐ 증상 악화 시 '재요양' 신청 준비